

장성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



제출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

장성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에 관련한 본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발주처	장성군의회	정책개발연구회
대표	김연수	장성군의회 의원
의원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오원석	장성군의회 부의장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	장성군의회 의원
	서춘경	장성군의회 의원
	최미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CONTENTS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과제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II. 장성군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장성군 지역 현황	9
2. 장성군 자치법규 현황	20

III. 장성군 신규 조례 제안

1. 신규 조례 제안	29
2. 기타 자치법규 입법 검토	87

IV. 장성군 조례 정비 제안

1. 장성군 조례 개정 제안	99
2. 장성군 조례 폐지 제안	140
3. 장성군 조례 통합 제안	143

CONTENTS

표 목차

[표 1] 장성군 최근 5년간 인구변화 추이	9
[표 2] 장성군 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현황 (내국인 기준)	10
[표 3] 장성군 1인가구 현황	11
[표 4] 전라남도 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 현황	20
[표 5] 장성군 조례의 편장 구성	23
[표 6] 제·개정 시기에 따른 장성군 조례 현황	24
[표 7] 장성군 조례 중 오래된 조례 top 30	25
[표 8] 주제별 분류에 따른 장성군 조례 현황	26
[표 9] 디지털포용법 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	30
[표 10] 장성군 어르신 생활디지털교육 지원 조례(안)	31
[표 11]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3
[표 12] 장성군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37
[표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40
[표 14] 장성군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표 15]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9
[표 16] 장성군 수변공원 관광자원 육성 조례(안)	53
[표 17] 장성군 지역문화역사 기록화 및 아카이브 지원 조례(안)	57
[표 18] 장성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안)	60
[표 19] 장성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4
[표 20] 장성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69
[표 21] 장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3
[표 22] 장성군 신중년 지원 조례(안)	77
[표 23] 장성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2
[표 24] 장성군 스마트 복지 행정 구축 및 운영 조례(안)	85
[표 25] 장성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87
[표 26]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88
[표 27] 타자치단체 행정사무원 직종 구분 사례	88
[표 28] 장성군 건축 조례	90
[표 29]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 내용	92
[표 30]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참고)	93
[표 31]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100
[표 32]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101
[표 33]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개정 내용	104
[표 3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 규정	108
[표 35]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개정 내용	110
[표 36] 장성군 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 조례 개정 내용	111

CONTENTS

[표 37]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114
[표 38] 전남 기초자치단체 출산축하금 비교	116
[표 39]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 내용	119
[표 40]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 신설	123
[표 41] 경로당 관련 개정 내용	125
[표 42] 청년공동체 지원 관련 개정 내용	128
[표 43]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개정 내용	130
[표 44]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 관련 개정 내용	132
[표 45]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개정 내용	135
[표 46]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련 개정 내용	138
[표 47]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안)	140
[표 48] 장성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3
[표 49]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	146
[표 50]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지원 조례(안)	147

그림 목차

[그림 1] 사업체 현황	12
[그림 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13
[그림 3] 지역 안전 관련 사회조사 결과	14
[그림 4] 저출산 관련 장성군 사회조사 결과	14
[그림 5] 보육문제 관련 사회조사 결과	15
[그림 6] 귀농어·귀촌 관련 사회조사 결과	16
[그림 7] 지역발전 관련 사회조사 결과	16
[그림 8] 지역 교통문제 관련 사회조사 결과	17
[그림 9] 우선 정비 도시경관 관련 사회조사 결과	17
[그림 10] 평생교육 관련 사회조사 결과	18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과제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을 넘으며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이 크게 성장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조례는 민주적 선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구체화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실질적 입법 수단임
- 과거에는 주로 중앙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의원 발의 조례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음
-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치입법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해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민선 8기의 임기가 이제 후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장성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장성군에 필요한 조례 발굴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시점에 도달함
- 이에, 장성군의 지역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시하고 발굴하며,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파악해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 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장성군의 발전적인 자치법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과제

☐ 장성군 일반 현황 및 조례 구성 현황 분석

- 장성군 인구·재정·산업 등 일반 현황 분석
- 장성군 조례 분야별·부서별·주제별 자치법규 분류를 통한 현황 분석
- 자치법규 키워드 중심 분석 등을 통한 특징 분석

☐ 장성군 현황 및 행정수요에 맞는 신규 조례 제정 제안

- 장성군 지역 및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부합하는 신규 조례 발굴 및 정비
- 우수사례 및 타 자치단체 비교 분석을 통한 장성군 현황에 맞는 신규 조례 제안
- 장성군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신규 조례안 발굴
- 최근 조례 입안 경향 분석을 통한 신규 조례안 제시

☐ 장성군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조례 개정 제안

- 중앙정부의 표준화에 따라 제정된 획일적인 조례를 장성군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 제안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장성군
- 시간적 범위 : 2025년 6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
- 내용적 범위 : 장성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장성군 일반 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정보에서 장성군 현황 확인
- 장성군 조례 부서별, 분야별 분류를 통해 조례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등 활용 조례 정비현황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
- 현행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타 지자체 조례 비교 분석

☐ 조례 검토 기준을 수립하여 분석

- 현행 조례 분석 및 조문 검토로 최신성 분석
- 현행 조례 분석 및 조문 검토로 조례 규정 내용 적합성 분석

II 장성군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장성군 일반 현황
2. 장성군 자치법규 기본 현황

1. 장성군 지역 현황

1) 장성군 기본 현황

- 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현황과 주민의 생활 환경, 행정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장성군 각종 관련 통계와 2024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함

□ 인구 규모

- 2024년 12월 기준 장성군의 총인구는 45,457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12월 기준 대비 총인구는 2,204명이 감소해 감소율은 4.8%를 보였음
-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14세 이하 유아·청소년층 인구는 2024년 12월 기준 3,318명으로 장성군 총인구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1,023명 감소해 비중은 1.8%p 줄어들었음.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14,469명으로 장성군 인구의 33.5%로 5년 전보다 1,057명이 늘어났으며 비중은 4%p 증가했음

[표 1] 장성군 최근 5년간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총인구수	45,457	100	44,288	100	44,176	100	43,678	100	43,253	100
0세~14세	4,341	9.5	4,028	9.1	3,738	8.5	3,469	7.9	3,318	7.7
15세 이상 ~64세	27,704	60.9	26,712	60.3	26,543	60.1	26,047	59.6	25,466	58.9
65세 이상	13,412	29.5	13,548	30.6	13,895	31.5	14,162	32.4	14,469	33.5

※ 장성군 주민등록인구현황 (장성군 홈페이지, 매해 12월 기준)

- 최근 2025년 6월 기준 인구수는 44,234명으로 2024년 12월 기준 대비 981명이 늘어났으며 내국인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비해 816명이 늘어났으며 세대수는 460세대 증가했음
- 2025년 6월말 현재 읍·면별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면 장성읍이 인구수가 1,187명이 증가했으며, 삼서면은 20명이 늘어났음.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지역에서는 모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삼서면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세대수의 증가가 더 큰 것이 특징임

[표 2] 장성군 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현황 (내국인 기준)

(단위 : 명)

지역	2024.12월 기준		2025.6월말 기준		증감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합 계	42,026	23,170	42,842	23,630	816	460
장성읍	13,492	6,931	14,679	7,532	1,187	601
진원면	3,610	1,812	3,564	1,783	-46	-29
남 면	3,632	2,249	3,581	2,211	-51	-38
동화면	1,803	1,098	1,799	1,095	-4	-3
삼서면	3,003	1,738	3,023	1,776	20	38
삼계면	5,206	2,723	5,094	2,684	-112	-39
황룡면	3,823	2,177	3,770	2,136	-53	-41
서삼면	1,504	874	1,473	870	-31	-4
북일면	1,328	828	1,306	816	-22	-12
북이면	2,653	1,535	2,606	1,529	-47	-6
북하면	1,972	1,205	1,947	1,198	-25	-7

※ 장성군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가공 (내국인 기준 외국인 미포함)

- 장성군의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6,433가구로, 이 중 절반 이상인 3,306가구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임
-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1,027가구가 늘어났으며,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1인 가구가 431가구,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406가구 증가하여, 두 연령층의 1인 가구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함
- 5년 간 성별 1인가구 변화를 보면 여자 1인 가구 증가(236가구)에 비해 남자 1인가구의 증가(791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장성군 1인가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2020년				2024년			
	1인가구	비중	남자	여자	1인가구	비중	남자	여자
합계	5,406	100	2,266	3,140	6,433	100	3,057	3,376
20세 미만	18	0.3	8	10	13	0.2	0	10
20세 이상 ~50세 미만	1,256	23.2	876	380	1,451	22.6	991	460
50세 이상 ~65세 미만	1,232	22.8	738	494	1,663	25.9	1,075	588
65세 이상	2,900	53.6	644	2,256	3,306	51.4	988	2,318

※ 통계청 인구총조사 1인가구 통계

□ 경제 및 산업 현황 (2023년 기준 장성군 통계연보)

- 농가인구는 장성군 총인구 43,678명의 26.6%인 11,6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자는 5,444명, 여자는 6,171명이었음
- 사업체 현황을 보면, 총 6,732개소 중 도매·소매업이 1,25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922개소, 운수 및 창고업이 870개소, 건설업이 809개소, 숙박 및 음식점업이 728개소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사업체 현황



※ 제64회 장성군 통계연보(2023년 기준)

2) 장성군 사회조사(2024년)

□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장성군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 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6.5%로 나타났고,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 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3.0%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만족’ 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6.6%로 2022년(56.7%) 대비 10.1%p 감소했으며, 의료서비스에 ‘불만족’ 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8.8%로 2022년(4.8%) 대비 4.0%p 증가함
 -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진료 대기 시간 및 입원 대기 시간’ (20.2%)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가 비싸다’ (19.4%),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13.0%),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12.3%) 순으로 나타남

□ 지역 안전

- (범죄피해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라고 응답한 군민은 8.4%였으며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라고 응답한 군민은 12.2%였음
-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먹거리에 대한 안전’ 평가(58.5%)가 가장 높았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58.2%), ‘전반적인 사회 안전’ (58.1%) 순으로 나타남. 반면, 안전하다는 응답이 낮은 부문은 ‘신종 전염병’ (43.6%), ‘정보보안’ (43.9%), ‘교통사고’ (47.1%) 등으로, 모두 50%에 미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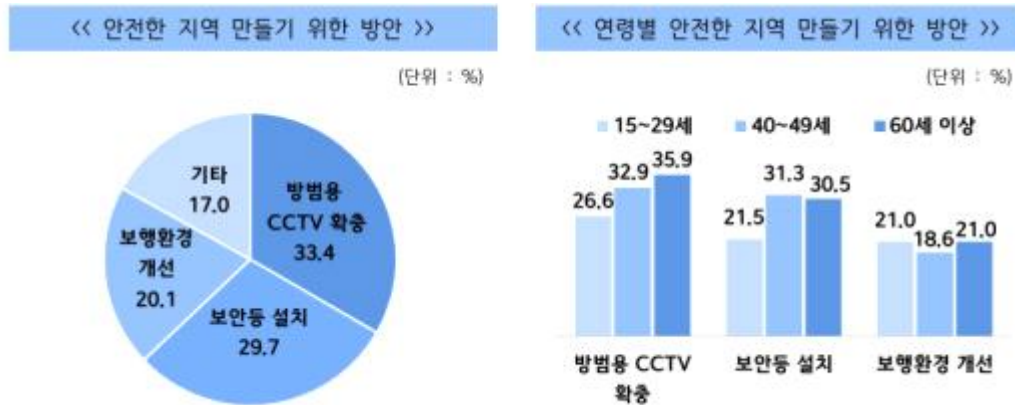
[그림 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지역 안전 대책)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방법용 CCTV 확충’ (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안등 설치를 통한 범죄 취약 지역 해소’ (29.7%), ‘보행환경 개선’ (2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지역 안전 관련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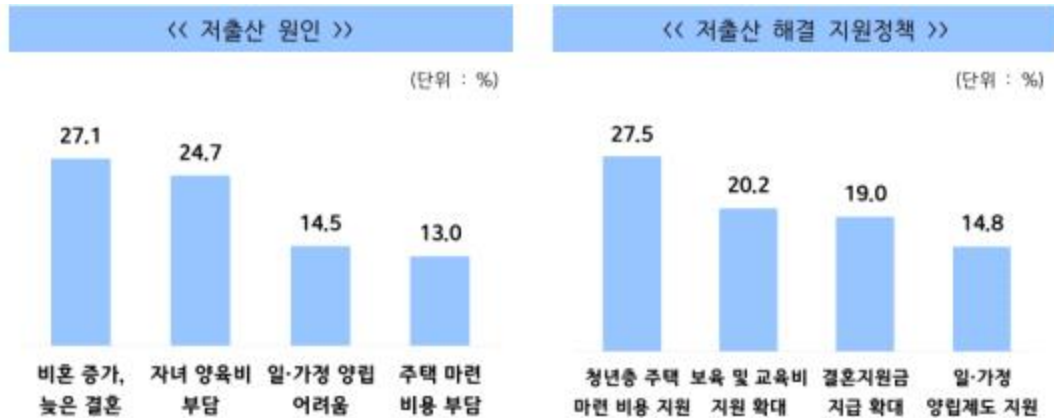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빈집 관리 대책) ‘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9%로, 2022년(19.1%) 대비 9.8%p 증가했으며, 빈집 처리 방안으로 ‘철거비 지원을 통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45.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 등 인구정책

- (저출산 해결 지원정책) 저출산의 원인을 ‘비혼 증가 및 결혼 연령의 상승’ (27.1%)으로 응답한 군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 (24.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4.5%), ‘주택 마련 비용 부담’ (13.0%)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으로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27.5%)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 저출산 관련 장성군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청년 지원정책)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 (27.8%)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 (17.3%), ‘구직활동수당 지원’ (12.3%) 순으로 나타났다.
- (보육정책)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 (3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4.6%),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11.3%) 순으로 나타남.
- 특히 30~39세 군민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0.8%)을 가장 시급한 보육문제로 응답함.

[그림 5] 보육문제 관련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귀농어·귀촌 정책) 귀농어·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원생활’ (3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정착자금 용자 지원’ (31.7%)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 귀농어·귀촌 관련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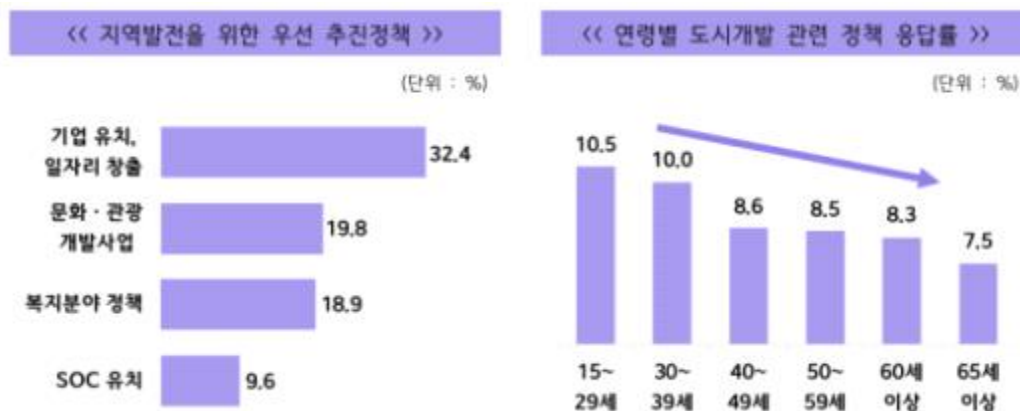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인구 증가정책)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 (16.7%),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16.5%), ‘귀농·귀촌 장려 정책’ (15.6%) 순으로 나타남

□ 지역 발전

- (지역 발전 우선정책) 지역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개발 관련 정책’의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 7] 지역발전 관련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교통문제) 장성군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로 확장 및 정비’ (3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 주정차 및 운행 단속’ (21.8%), ‘버스 노선 개선 및 운행 횟수 확대’ (12.3%), ‘주차시설 확대’ (9.9%) 순으로 나타남. 특히 북부권의 경우 ‘도로 확장 및 정비’ 응답률이 50.5%로 타 지역권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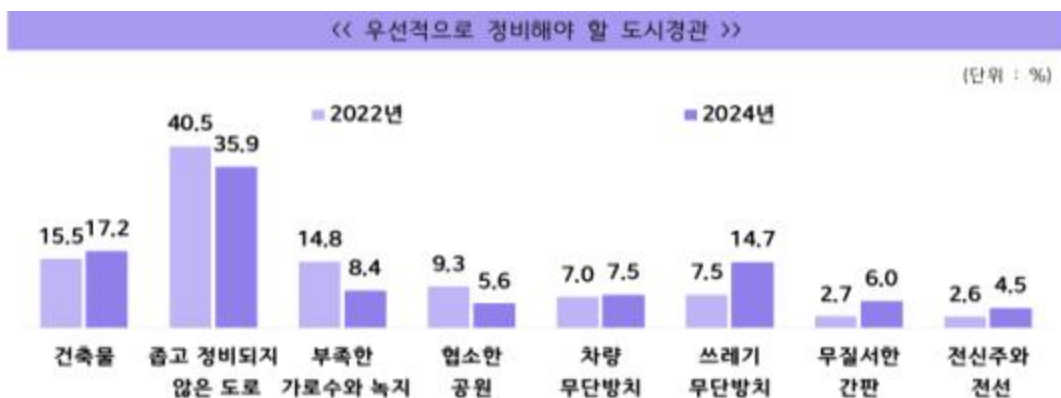
[그림 8] 지역 교통문제 관련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우선 정비 도시경관)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도시경관으로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 (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물’ (17.2%), ‘쓰레기 무단 방치’ (14.7%),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8.4%) 순으로 나타남
- 북부권의 경우 ‘건축물’과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응답률이 각각 22.7%, 45.0%로 타 지역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차량 무단 방치’의 응답률은 각각 2.9%, 3.4%로 타 지역권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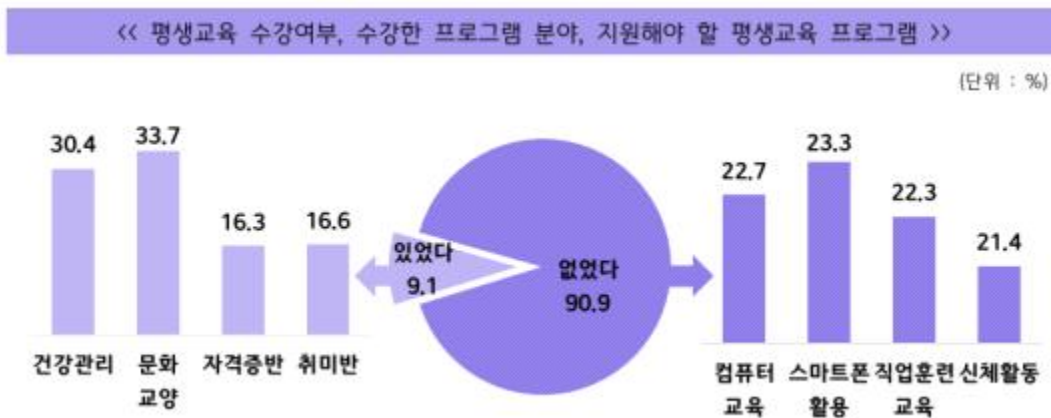
[그림 9] 우선 정비 도시경관 관련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 (평생교육) 지난 1년간 평생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9.1%로, 2022년(8.6%) 대비 0.5%p 증가했으며, 이 중 평생교육을 관내에서 수강한 군민은 79.4%, 관외에서 수강한 군민은 20.6%로 나타남. 군민이 가장 많이 수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교양’ (33.7%)으로 나타남.
- 가장 지원이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활용’ (23.3%)과 ‘컴퓨터 교육’ (22.7%) 등 정보교육 관련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평생교육 관련 사회조사 결과



※ 2024년 장성군 사회조사

3) 지역 현황을 통해 본 조례 입법 방향

□ 요약

- (인구 및 가구 구조) 총인구는 감소세이나 2025년 들어 장성읍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33.5%, 청소년 인구는 7.7%에 불과해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1인 가구는 6,433가구로,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산업) 농가 인구가 전체의 26.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전통 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 삶과 지역생활 만족도는 70%대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진료 대기시간, 의료비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안전·주거 환경) 범죄 불안은 낮은 편이나, CCTV와 보안등 확충 요구가 높으며, 빈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정책 수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혼·늦은 결혼, 양육비·주거비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음. 청년 정책으로는 취업 상담·알선(27.8%), 주거비 지원(17.3%)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보육 정책은 보육비 지원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귀농·귀촌 정책은 정착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또한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 발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도로 확장 등 교통문제 해결과 건축물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강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조례 입법 방향

- 지역 현황을 토대로 조례 입법 방향을 설정해 본다면, 고령층 돌봄 및 안전망 강화, 청년·보육·주거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활성화,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평생학습과 정보화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장성군 자치법규 현황

1) 전남 내 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비교

□ 장성군 조례수, 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적어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성군의 조례 수는 426개로,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9번째로 적으며, 구례군과 곡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곳은 나주시로, 737개의 조례를 운영 중이며, 여수시(712개), 목포시(691개), 순천시(648개), 광양시(556개) 순으로 나타남.
- 전남 내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무안군(561개)이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신안군(551개), 해남군(506개), 담양군(494개) 순으로 나타남.

[표 4] 전라남도 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 현황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나주시	737	139	58	21	955
여수시	712	132	99	10	953
목포시	691	135	70	26	922
순천시	648	143	69	14	874
광양시	556	141	76	5	778
무안군	561	111	59	7	738
신안군	551	106	53	8	718
해남군	506	107	56	36	705
담양군	494	113	70	18	695
완도군	517	92	58	12	679
함평군	484	106	68	15	673
영암군	488	103	62	10	663
영광군	464	103	70	15	652
보성군	465	106	61	12	644
고흥군	469	107	59	2	637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강진군	454	102	62	7	625
장흥군	445	107	52	10	614
화순군	452	104	53	5	614
진도군	435	99	67	1	602
장성군	426	95	39	15	575
곡성군	422	87	50	7	566
구례군	400	88	42	8	53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5.8.17. 현재)

2) 장성군 자치법규 세부 현황

□ 장성군 조례 편장 구성, 총무(49개)-기획(40개)-가족행복(36개)

- 장성군 조례의 편·장 구성을 살펴보면, 편·장의 명칭이 집행부 행정조직도와 일치함
 - 조례의 편명은 부서명, 장은 팀명으로, 홈페이지 조직도상의 순서와 편·장의 배열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 편·장 구성에 따른 조례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례가 포함된 편은 제3편 총무(49개)이며, 그다음은 제2편 기획(40개), 제9편 가족행복(36개), 직속기관(31개)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조례가 포함된 장은 제19편 직속기관의 제1장 보건소로, 24개의 조례가 편재되어 있으며, 제12편 제1장 안전관리(17개), 제3편 총무 제1장 행정(16개), 제2장 서무후생(14개), 제3장 자치분권(13개) 순으로 나타남
- 조례의 편·장 구성이 행정조직도와 일치함에 따라 여러 오류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8월 22일 기준 제3편이 인구경제와 총무, 두 개로 중복되어 존재하며, 반면 제7편은 누락되어 있음
 - 제20편 사업소는 ‘장’ 표기 없이 사업소명만 기재되어 있음
 - 편·장은 존재하나 해당 팀에 대응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됨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경우, 제11편 세무회계 제1장 세정에 편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제2장 부과에 편재되어 있어 체계상 불일치가 나타남
- 이처럼 조례의 편·장 구성을 행정조직도에 따라 설정할 경우, 조직 개편 시 편·장 체계의 불일치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 행정 이해도를 낮추고, 군민이나 의회가 관련 조례를 검색·활용할 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표 5] 장성군 조례의 편장 구성

편장	조례수	편장	조례수	편장	조례수
제1편 의 회	24	제8편 주민복지	25	제15편 농업축산	15
제2편 기 획	40	제1장 복지기획	7	제1장 농업정책	8
제1장 기획	8	제2장 장애인복지	8	제2장 친환경농업	2
제2장 예산	13	제3장 통합조사	2	제3장 식량산업	3
제3장 감사	6	제4장 희망복지	8	제4장 축산	0
제4장 홍보	3	제9편 가족행복	36	제5장 동물방역	2
제5장 법무통계	10	제1장 노인복지	6	제16편 농산유통	12
제3편 인구경제	25	제2장 여성다문화	9	제1장 유통기획	1
제1장 인구청년	5	제3장 아동청소년	13	제2장 원예산업	2
제2장 지역경제	12	제4장 노인시설	8	제3장 먹거리정책	6
제3장 일자리	4	제10편 환경	14	제4장 농촌산업	3
제4장 산단조성	0	제1장 환경정책	2	제17편 산림편백	10
제5장 기업지원	4	제2장 환경지도	4	제1장 녹지경관	3
제3편 총무	49	제3장 기후환경	3	제2장 편백육림	2
제1장 행정	16	제4장 자원순환	5	제3장 산림보호	4
제2장 서무후생	14	제11편 세무회계	16	제4장 산림소득	1
제3장 자치분권	13	제1장 세정	5	제18편 교통에너지	16
제4장 정보통신	6	제2장 부과		제1장 대중교통	7
제4편 민원봉사	11	제3장 징수	4	제2장 에너지	5
제1장 민원행정	4	제4장 경리	5	제3장 교통복지	3
제2장 건축인허가	3	제5장 재산관리	2	제4장 차량등록	1
제3장 개발민원	0	제12편 재난안전	25	제19편 직속기관	31
제4장 지적	3	제1장 안전관리	17	제1장 보건소	24
제5장 지적재좌	0	제2장 중대재해	0	제2장 농업기술센터	7
제6장 부동산관리	1	제3장 방재	8	제20편 사 업 소	14
제5편 관광	12	제4장 상황관제	0	맑은물관리사업소	8
제1장 관광정책	3	제13편 건설	10	체육사업소	5
제2장 축제기획	1	제1장 건설관리	5	항룡강사업소	1
제3장 관광개발	0	제2장 도로시설	2	제21편 읍 면	2
제4장 관광시설	3	제3장 농업기반	2	제1장 읍 · 면	1
제5장 식품위생	5	제4장 하천관리	1	제2장 이동반	1
제6편 문화교육	23	제14편 지역개발	17		
제1장 문화예술	6	제1장 도시계획	5		
제2장 문화자원	4	제2장 도시재생	4		
제3장 교육지원	9	제3장 농촌개발	3		
제4장 평생학습	3	제4장 주택	5		
제5장 도서관	1	제5장 공공시설지원	0	합계	427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5.8.17. 현재)

□ **장성군 427개 조례 중 현재 임기 이전 제·개정된 조례는 195개**

- 장성군 현행 조례 427개 중,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는 232개로 전체의 54.3%를 차지하며, 제9대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나머지 195개 조례는 제8대 의회 및 그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은 조례로 파악됨.

[표 6] 제·개정 시기에 따른 장성군 조례 현황

제개정시기	조례수
제5대(2006.7~2010.6)	10
제6대(2010.7~2014.6)	15
제7대(2014.7~2018.6)	29
제8대(2018.7~2022.6)	141
제9대(2022.7~현재)	232
합계	427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5.8.17. 현재) 조례 현황 재정리

□ **제·개정된 지 가장 오래된 조례는 ‘장성군의회 공인 조례’**

- 장성군 현행 조례 427개 중,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된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 총 9개임.
 - 「장성군의회 공인 조례」,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장성군민 헌장 조례」, 「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장성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임.
- 또한, 장성군 조례 중 제정 또는 개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조례는 총 30개로, 현재 지역 여건 변화나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이들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7] 장성군 조례 중 오래된 조례 top 30

법규명	제·개정일	제·개정	소관부서
장성군의회 공인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의회사무과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민원봉사과
장성군민 헌장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자치행정국 총무과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2008-12-31	일부개정	건설농정국 지역개발과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010-03-25	제정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12-23	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홍길동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2010-12-23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관광과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1-14	제정	관광복지국 환경과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11-03-10	제정	관광복지국 환경과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1-03-10	일부개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05-13	제정	건설농정국 건설과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2011-07-20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	2011-12-15	일부개정	보건소 보건정책과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1-02	제정	인구경제실
장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2012-07-20	전문개정	보건소 보건정책과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	2012-09-07	제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013-05-15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	2013-10-14	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013-11-20	제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2014-05-13	일부개정	농업기술센터

법규명	제·개정일	제·개정	소관부서
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02-05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2-05	일부개정	관광복지국 총무과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5-02-05	일부개정	건설농정국 교통에너지과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2015-02-05	일부개정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15-05-13	일부개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5.8.17. 현재) 조례 현황 재정리

□ 행정·재정 및 일반 행정 조례가 제일 많아

- 조례명과 해당 조례의 소관 부서를 기준으로 5개 주제로 분류하여, 장성군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 행정·재정 및 일반행정 분야가 134개로 가장 많은 조례가 속한 분야였으며, 그다음으로 주민복지 및 사회 분야(73개), 건설·도시개발 및 환경 분야(65개), 농업·경제 및 산업 분야(60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37개) 순으로 나타남

[표 8] 주제별 분류에 따른 장성군 조례 현황

주제(대분류)	세부 정책 분야(소분류)	조례수
행정·재정 및 일반 행정	조직/인사, 재정/세무, 행정 시스템, 공공 서비스, 의회 운영	134
주민복지 및 사회	노인/청소년/장애인 복지, 보건/의료, 사회 지원, 인권	73
건설·도시개발 및 환경	교통, 도시/주택, 재난/안전, 환경	65
농업·경제 및 산업	농업/축산, 지역 경제, 산업 진흥, 일자리, 기업 유치	60
문화·관광 및 교육	문화/예술, 관광, 교육, 평생학습	37
기타	기타	58

III 장성군 신규 조례 제안

1. 신규 조례 제안
2. 기타 자치법규 입법 검토

1. 신규 조례 제안

- 1) 장성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2)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안
- 3) 장성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 4) 장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 5) 장성군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장성군 잔디산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 7) 장성군 수변공원 관광자원 육성 및 관리 조례안
- 8) 장성군 지역문화역사 기록화 및 아카이브 지원 조례안
- 9) 장성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
- 10) 장성군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장성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12) 장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13) 장성군 신중년 지원 조례
- 14) 장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 15) 장성군 스마트 복지 행정 구축 및 운영 조례

1) 장성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장성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장성군민들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활용’과 ‘컴퓨터 교육’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 전반이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교통·의료 앱 등으로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컴퓨터 교육’을 넘어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이제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료·행정 접근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본 역량으로서 자립과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됨
- 최근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표 9] 디지털포용법 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디지털 활용이 가장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장성군 역시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 강사 양성, 디지털 경로당 운영,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제도적 개선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지자체 입법 사례

- 전국 지자체 중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및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24곳임.

- 전라남도에서는 무안군이 2025년 4월 7일 「무안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군수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
- 지원 대상 및 교육 내용 명시
 - 생활 필수 교육
 - 온라인 안전 교육
 - 찾아가는 교육
 - 교육환경 개선
- 추진체계 및 협력 시스템 구축
 - 교육 운영 기관
 - 교육 인력 양성 및 활용
 - 협력체계 구축

[표 10] 장성군 어르신 생활디지털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어르신”이란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장성군 주민을 말한다
- 2.“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3.“현장체험 학습”이란 지역상권 등의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성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어르신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필수 디지털 활용 교육
2.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
3. 온라인 안전 및 금융 교육
4. 디지털 학습 보조 인력 지원
5. 찾아가는 생활디지털 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

② 군수는 교육장비 및 교재 개발, 교육장소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운영 기관)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어르신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교육 인력 양성 및 활용) 군수는 디지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청년 또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교육 보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 인정 또는 실비 보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복지시설 및 민간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s)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함.
- 이들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복지제도는 주로 돌봄을 받는 사람(환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비용 지원, 긴급 돌봄서비스 연계, 심리상담 제공 등을 통해 이중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타자치단체 사례

- 전국 자치단체 중 95곳에서 관련 조례 입법 중임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본청을 비롯해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 고흥군 등 7곳에서 관련 조례 운영 중임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사회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돌봄 현황 및 부담 정도, 학업·취업의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 등
- 지원 사업 :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교육 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자립 지원 / 문화·체육활동 지원 / 용품 지원 /인식 개선 홍보

[표 11]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장애, 정신 질환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3. 심리·정서 상담 지원
4. 직업훈련·취업 및 자립 지원
5. 문화·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7.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및 대학
2.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3.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3) 장성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청년층은 취업, 학업, 창업 등 사회진입 단계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불안은 청년의 자립 지연과 지역 정착 기피,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통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지원이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한 임대주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임차료, 중개수수료 등 청년의 실질적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입법 검토

□ 타지자체 입법 사례

- 전국 지자체 15곳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청년 주거 기본 조례」 등으로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주거 전반을 포괄하는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본청의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뿐임
 - 다만 나주시의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곡성군의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여수시의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 화순군의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조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 중심으로 한 조례들이 입법되어 있음

나. 입법 방향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 “청년”의 범위(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주거지원”, “주거비” 등의 용어 정의

○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5년 단위의 청년 주거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주거 실태조사 실시(주거 형태, 비용,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등)
-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 지원 사업

-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연계.
- 재정 지원 : 보증금·월세 융자 및 이자 지원, 임차료 지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사업(리모델링, 생활 안전 시설 보강 등)
- 주거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구축

- 청년 주거지원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 보장
- 관계기관과의 협력

[표 12] 장성군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주거지원"이란 청년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가 추진하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주택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 등 주거 생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청년주거기준"이란 청년이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주거환경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주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5년 단위의 장성군 청년 주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2. 청년 주거 지원 목표 및 중장기 추진 전략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주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군수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거지원 정책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연계 지원
2.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및 월세 용자 지원
3. 제2호에 따른 용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4. 저소득 청년 가구 등에 대한 임차료(월세) 지원
5. 주거 이전에 수반되는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6. 노후 주택 등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생활 안전 시설 보강 사업
7. 주거 상담, 주거 정보 제공 및 금융·주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청년주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주거 지원 사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 당사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주거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장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CCTV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도시 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설물 파손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은 방범 사각지대가 많아 영상기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 현재 방범용, 재난감시용 등 개별 목적에 따라 CCTV가 설치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분산 설치·운영되는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CCTV 설치하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목적, 운영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CCTV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타지자체 입법 사례

- 전국 지자체 78곳에서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진도군, 보성군, 완도군 등 10곳에서 조례 운영 중임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군수의 책무
- 영상정보기기 설치 기준 및 절차 마련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표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해 장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무선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말한다.
2. “통합관제센터”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장소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운영 부서”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관리하는 장성군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재난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 목적으로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의 안정적인 전송 및 저장, 통합관제센터와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와 범위로 설정할 것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운영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행정 예고 등 설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군수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7조(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 소속 각 운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하여 관제 인력(관제요원)을 확보하고 관제 시스템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보관)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심의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3.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관제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계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장성군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최근 신규 임용자나 근속 5년 이하의 자연차 공무원들이 조직문화와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대응 스트레스, 잦은 부서 순환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퇴직과 사기 저하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장성군과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사무과와 같은 소규모 기관의 경우,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개인별 업무 부담이 크고, 선배 공무원의 기존 업무 관행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함.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일부 교육훈련이나 멘토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차 공무원을 위한 멘토링 운영, 직무교육, 심리상담, 조직 내 소통 활성화 등 지원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초기 적응을 돕고 장기적으로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자연차 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군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나아가 청년 인재의 안정적 유입과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타지자체 입법 사례

- 전국 지방의회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한 곳은 충남 서천군의회, 강원 원주시의회, 서울 구로구의회 등 3곳임
- 자치단체(집행부)는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입법했음

□ 주요 내용

○ 저연차 공무원의 정의

- 소속된 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

○ 실태조사

○ 지원 계획

-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 협력체계 구축

[표 14] 장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연차 공무원"이란 장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임용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현황 및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연차 공무원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지원사업의 추진 전략 및 재원 확보 방안
3.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지원
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장성군은 국내 잔디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한국 잔디산업의 중심지로, 잔디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특화산업임. 이에 따라 잔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잔디산업을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유통·판매 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 연구·인력 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잔디 재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 관련 기관과 농가,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협의체가 지역 잔디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관련 법률 제정이나 국가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잔디 산업의 범위를 생산,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 시설물 조성(잔디 정원, 스포츠 시설), 유지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함.
 - 잔디 산업의 1차(생산)와 2·3차(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
- 5년 단위의 잔디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및 포함 사항 명시
- 지원사업

- 품종 개량, 시설 현대화, 공동 브랜드 개발 등
- 잔디산업의 혁신), 유통 경쟁력 융복합화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관내 공공시설 및 조경사업에 필요한 잔디를 지역 잔디 생산자로부터 우선 구매 및 사업 참여 기회 보장
- 잔디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설치
 - 잔디산업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심의/자문 기능 명시
 -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생산자, 전문가, 행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

[표 15]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잔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잔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잔디산업"이란 잔디의 생산,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잔디 정원, 잔디 스포츠 시설 등)의 조성,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일체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p> <p>2. "잔디산업 활성화"란 잔디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지원 시책을 말한다.</p> <p>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잔디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군민 및 잔디 산업 관련 사업자는 잔디 산업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잔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잔디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디 산업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 2. 잔디 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잔디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잔디 품종 개발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잔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잔디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잔디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잔디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잔디 품종 개량, 생산성 향상, 병해충 방제, 부산물처리 및 자원화 등 기술 개발 사업
2. 잔디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사업
3. 잔디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4. 잔디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잔디 농가 및 잔디 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 지원
6. 잔디를 활용한 관광, 체험, 조경 등 부대사업 개발
7. 잔디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사업
8. 그 밖에 잔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잔디 산업 활성화) ① 군수는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성군 관내의 공공시설 및 공원, 체육 시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잔디를 지역 잔디 생산자로부터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잔디 관련 사업에 잔디 농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잔디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 공공 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
3. 잔디 관련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잔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등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잔디 사업자가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 사업 계획, 입찰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잔디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군수는 잔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잔디의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 새로운 용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잔디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잔디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잔디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군 건설농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잔디농가·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잔디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잔디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장성군 수변공원 관광자원 육성 및 관리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장성군 핵심 관광자원의 가치 극대화 및 통합 관리 필요

-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 황룡강 꽃길 등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통해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개별 사업 단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체계 및 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조례를 통해 수변 공간을 ‘수변공원 관광자원’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고, 「사계절 관광 테마파크 조성」 등 중장기적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야간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장성군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일치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수변 공간은 야간 경관 조성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를 활용해 고품질 야간 콘텐츠(조명, 공연, 미디어아트 등)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활성화,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 및 안전 관리 강화

- 관광객 증가에 따라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관광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조례를 통해 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친수활동 안전 확보 의무, 환경영향 최소화 원칙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개발과 생태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수질 관리, 쓰레기 감축, 생태탐방로 지정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행

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 및 주민 상생 체계 확립**

- 현재 장성호 수변길에서 시행 중인 ‘이용료 징수 후 상품권 환급’ 제도처럼, 관광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관광수익 배분과 주민복지 연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이용료 등 관광수입을 단순히 군 재정수입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변공원 관리·주민복지·문화행사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포함해야 함.
-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여, 관광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 방향

☐ **통합적 관리 체계 및 장기 계획 확립**

- 장성호와 황룡강 일대 수변 공간을 ‘수변 공원’이라는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
- 군수가 5년 단위의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 야간 경관 및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명시
- 친수 활동의 안전 확보 및 시설 기준 마련 의무화

☐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 및 환경 책임 명시**

- 군민 및 민간단체의 수변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활동 지원 명시

☐ **관광 수익의 공정 환원 및 주민 상생 구조 구축**

- 이용료 징수 및 지역 환원에 관한 규정 마련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 의무화

[표 16] 장성군 수변공원 관광자원 육성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수변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특화 관광자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변공원"이란 장성호, 황룡강 등 장성군 관할 구역 내의 수역(水域)과 연접하여 조성되거나 지정된 공원, 수변생태공간 및 수변길을 말한다.
2. "수변 관광자원"이란 수변공원 내에 설치된 시설물과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축제, 특화된 경관 등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관광 요소를 말한다.
3.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변공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변 생태계의 보전과 친수 공간의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광 활성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변 관광자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수변관광자원의 지속적가능한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수변관광자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변관광자원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야간관광 활성화 및 경관 조성 계획
3. 생태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4. 이용료 징수 및 지역 환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화 관광 사업 지원) 군수는 수변 공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변을 활용한 테마 콘텐츠 및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2. 야간 경관 및 관광시설물의 설치·개선
3. 수변공원과 연계한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관광자원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친수 활동 및 시설 관리) ① 군수는 수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친수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변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관리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정기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수변 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수변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군민 및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수변 생태계 모니터링·정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변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 참여) ① 군수는 수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상생을 위하여 수변공원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변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소음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징수 및 지역 환원) ① 군수는 수변공원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공원 관리 및 인근 지역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수변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 부서, 환경 부서, 지역 주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장성군 지역문화역사 기록화 및 아카이브 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지역 정체성 확보 및 기록의 소멸 방지

- 장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백양사, 홍길동의 출생지, 다양한 농업·생활 유산 등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 기록 외의 구술 자료, 사진, 영상, 민간 소장 기록물 등은 개인에 의해 흩어져 관리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의 문화·생활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군 차원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지식 자원화 및 지역의 문화 가치 창출

- 기록물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관광·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민의 구술 기록과 농업·생활 유산에 관한 기록은 장성군만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기록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주민을 단순한 대상이 아닌 ‘기록의 주체’로 참여시켜 구술기록화 사업, 마을 단위의 기록 활동, 주민 주도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함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군수가 5년 단위의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기록화 대상의 명확화

- 기록화 대상을 지역 발전사, 문화예술 기록 외에도 향토 산업 및 농업 유산 기록, 인물 및 구술 기록 명시
- 민간 영역의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 강화

○ 구술 기록화 사업 지원 근거

- 주민들의 근현대 생활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는 구술 기록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

○ 아카이브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테마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지원
-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 디지털 지도, 모바일 앱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명시

○ 주민 참여 및 상생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 주민 주도 사업 보조 근거 마련
- 기증자 예우 명시

[표 17] 장성군 지역문화역사 기록화 및 아카이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문화역사의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 및 관광 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역사"란 장성군의 역사, 생활, 예술, 산업 등 군민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문화를 말한다.
2. "기록화"란 장성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모든 자료를 조사, 발굴·수집하여 보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아카이브"란 지역 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4. "구술 기록화"란 장성군민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 채록하여 영상 또는 음성 기록물로 남기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역사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카이브 구축과 군민의 접근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문화역사 및 아카이브 구축·활용에 관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역사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기록화 목표
2.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방안
3. 아카이브 활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구술 기록화 사업 추진 계획
5. 재원조달 계획 및 민간 협력 방안

제5조(기록화 대상 자료) 기록화 대상 자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향토 산업 및 농업 유산 자료
5. 인물 및 생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6조(구술 기록화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성군의 근현대 생활사 및 농업 유산 등에 대한 주민의 생생한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구술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술 기록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조직,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에 사업 수행을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고를 통하여 실물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아카이브 운영 기관 지정) 군수는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군립 도서관 등 관련 시설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개) ①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및 콘텐츠 개발 지원)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주민 참여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마을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 지원
2. 향토 자료를 활용한 테마 관광 상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기념품 개발
3.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아카이브 자료를 디지털지도, 모바일 앱 등과 연계하는 첨단 활용 시스템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의 기록화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박물관,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아카이브 활용 사업에 대한 보조)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주민 주도 사업체 또는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9) 장성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조례의 실효성 및 책임성 확보

- 매년 다수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으나, 해당 조례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군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절차가 부족함.
- 입법 평가를 의무화하여 정책 입안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를 적시에 폐지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정 효율성 및 예산 낭비 방지

- 재정 부담이 큰 조례나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례에 대해 예산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지속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입법 방향

☐ 평가 체계 및 대상 명확화

- 평가 대상 및 시기 규정
- 평가 전담 조직 지정

☐ 평가 기준 및 방법의 전문성 확보

- 평가 기준 설정
- 전문가 및 군민 참여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 의무

- 평가 결과의 반영 노력
- 평가 결과의 의회 보고 의무화

[표 18] 장성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및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례 입법 평가"란 장성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운영 상황 및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총괄부서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평가 기준 마련, 평가 결과 취합 및 보고 등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평가 대상 및 시기)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3.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입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입법근거 및 적법성
 2. 입법 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 여부
 3. 입법내용의 공정성
 4. 주민의견 수용성
 5.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6.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7.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총괄부서장을 포함한 군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결과 보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성군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입법 필요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하수도관, 통신선, 전력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공동(空洞) 발생과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고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역 내 지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지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안전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개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반 침하 등의 사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즉각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주요 입법 내용

- 군수의 책무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지하 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절차 명시
-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 마련

[표 19] 장성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지하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개발을 말한다.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장성군 관할 구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장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군수는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그 인근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포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군수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군수가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장성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스마트 행정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인공지능(AI)은 행정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반임.
- 농업, 행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국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 필요

□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 기반 조성

- 인공지능의 활용이 행정·산업·생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군민의 권리 보호와 신뢰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 장성군이 추진하는 스마트행정·스마트농업 등 각종 인공지능 기반 사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나. 주요 입법 방향

- 군수의 정책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관내 기업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 군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및 안전 확보
- 윤리성·투명성·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표 20] 장성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윤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성군의 스마트 행정 및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서비스"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 산업,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말한다.
4. "스마트 시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전략과제
3.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의 윤리성, 투명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
3. 인공지능 서비스 추진 및 지원
4.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
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4.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장성군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및 기술 개발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공간 지원

2. 시범 사업 및 실증 환경 조성 지원

3.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 공유 및 활용)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군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수집, 가공, 개방 및 연계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① 군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 장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노후되거나 생육 상태가 불량한 수목이 예고 없이 쓰러지거나 가지가 낙하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고사·병충해·노령화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거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위험수목의 제거에는 벌목, 운반, 폐기물 처리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고령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권 내 수목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 입법 방향

□ 지원 대상 및 기준 명확화

- 생활위험수목을 주택, 도로, 보행로 등 생활권에 인접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수목으로 정의함.
- 지원 대상을 고사목, 부패목, 전도 우려목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미관 개선, 조경,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한 신청이나 단순 불편 해소·영리 목적의 수목 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처리반 운영

-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 대응을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처리반은 위험수목 신고 및 민원 접수, 현장조사와 처리, 재난·풍수해 등 긴급 상황 시 응급조치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행정적 책임과 절차의 명확화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처리 과정에서 민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채 후 발생하는 부산물은 신청인 또는 토지·수목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함.

[표 21] 장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장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도로, 보행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바람·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생육상태에 따라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책무)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절차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체계
3. 위험수목 처리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수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정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목의 미관 개선, 조경, 일조권 확보 등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등의 관리 지역

4. 대나무 제거 또는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등 사적인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크레인 등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의 수목

6.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긴급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수목의 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부산물 처리) 위험수목의 벌채 또는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또는 수목 소유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업체 또는 관계기관에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수목에 대한 신고·민원 접수 및 현장 처리
2. 위험수목 실태조사 및 제거계획 수립
3. 재난·풍수해 등 긴급상황 시 응급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3) 장성군 신중년 지원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청년, 노인 대상 별도 정책 및 조례 있지만 신중년 별도 조례나 정책 부재

- 장성군에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며, 신중년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은 「장성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주거 및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로당 및 노인단체 지원, 일자리 제공, 복지 향상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신중년층’으로 정의(제2조제5호)하고, 여성·장애인·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과 함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7조제4호)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 지원 조항에 불과함.
- 따라서 해당 조례만으로는 신중년 세대의 복지, 사회활동 참여, 재취업 역량 개발, 은퇴 이후 삶의 질 제고 등 다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더불어 장성군의 신중년 정책은 언론보도나 예산 편성 내역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이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됨.

☐ 은퇴 이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은퇴 이후 인생 재설계

- 신중년 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시기로, 생애 주기에 맞는 새로운 인생 경로(경력 개발, 재취업, 사회공헌, 여가 등)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 단순한 ‘일자리 제공’ 중심의 지원을 넘어, 교육·상담·커뮤니티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신중년은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잠재적 인적 자원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활발히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은퇴 이전에는 경력 전환과 인생 재설계를 위한 교육과 상담, 은퇴 이후에는 사회참여와 복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단위로서, 지역별 특성과 신중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와 실행 체계 구축이 요구됨.

나. 주요 입법 방향

☐ 신중년 정책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신중년 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신중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 주요 구성은 집행부, 관련 단체, 전문가와 함께 의회에서 1인이 참여해 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의 눈으로 신중년정책 계획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신중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신중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비롯해 보건소, 민간단체, 학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

☐ 신중년 전담 시설 운영

- 신중년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시설 운영

☐ 신중년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실효성 있는 신중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에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표 22] 장성군 신중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신중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중년 지원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중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중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신중년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신중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에 해당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중년 실태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교육 지원 사업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지원 사업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
3. 신중년 관련 정책 연구 및 통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 사업
 2.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3. 신중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신중년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신중년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신중년 권익증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신중년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장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신청주의 복지시스템의 한계 극복

-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위기가구, 은둔형 외톨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복지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낙인감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행정이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읍·면 단위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방문 상담, 안부 확인, 긴급 지원 등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체계 마련

- 이웃 주민,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공동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들의 활동에 대해 포상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복지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입법 방향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민관 협력’ 등 용어 정의
-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명시

- 지원 사업 :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방문 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 **민관 협력 및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

-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주민 참여 유도 및 포상
- 업무 수행 인력 지원 및 안전 확보

[표 23] 장성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보건 상담, 민관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고립 등 경제적 또는 심리·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 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성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 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맞춤형 방문 상담 및 통합 서비스 연계
3.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6조(민관협력)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의료·복지·주거·고용 관련 민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역량 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의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서비스 연계에 기여한 주민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신고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행 인력 안전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 인력에게 안전 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 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장성군 스마트 복지 행정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가. 입법 필요성

□ AI-IOT 기술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성군은 현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디바이스 지원 사업’을 통해 150명의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군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AI·IoT 등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비대면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부천시의 ‘온마음 AI복지콜’ 서비스 사례¹⁾는 인공지능(AI) 콜봇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전화를 걸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천 명의 대상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복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고령화 심화와 복지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기존의 인력 중심 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장성군도 AI·IoT 기반의 스마트 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접근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비대면 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필요

나. 주요 입법 방향

- 기본 이념 및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근거
- AI-IOT 건강관리 지원 및 AI 복지콜 서비스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시
 - 복지콜·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저장·활용 절차 마련

1) 부천시 보도자료 “부천시, ‘온마음 AI복지콜’ 6월 16일부터 본격 운영” (2025.6.13.)

[표 24] 장성군 스마트 복지 행정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행정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에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복지행정"이란 복지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AI·IoT 스마트 서비스"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기기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AI 복지콜"이란 인공지능 콜봇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장성군은 AI·IoT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를 줄이는 디지털 포용복지를 지향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복지행정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마트 복지행정 추진과 관련한 기술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 복지 행정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 복지행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장성군 스마트 복지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마트 복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2. AI·IoT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대책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 방안
- 그 밖에 스마트 복지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AI·IoT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혈당계, AI 스피커 등 IoT 기반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AI 복지콜 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AI 복지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AI 복지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스마트 복지행정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① 군수는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저장된 군민의 건강 및 복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자치법규 입법 검토

1)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현행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행정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사무원은 보조적 지위에 머물러 단독 또는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업무 경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역할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원의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유 업무 구분의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표 25]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행정사무원 :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2. 단순노무원 : 관제요원, 의료업무종사원, 시설물관리원, 주정차관리원, 청사안내원, 가로수관리원, 검침원, 국궁장운영원, 육묘장관리원, 운전원, 농기계수리원, 가공장비운용요원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환경미화원 : 도로청소, 쓰레기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행정사무원이 반드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장성군의 공무직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사무원의 고유 업무를 직종 분류에 포함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예를 들어, 고양시는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행정공무직군을 사무, 연구, 상담, 조사, 지도 등으로 구분하고, 별표를 통해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급여관리사, 영양사(급식), 조리사 등 11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음.

[표 26]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직군 및 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군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6.19., 2025.2.21.>
1. 행정공무직군: 사무, 연구, 상담, 조사, 지도 등 행정분야 <개정 2025.2.21.>
2. 환경공무직군: 가로청소, 공원관리, 도로보수, 준설, 검침 등 환경분야 <개정 2025.2.21.>
3. 보건공무직군: 보건분야 <개정 2025.2.21.>
4. 관리공무직군: 기술·시설 관리분야 <개정 2025.2.2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군에 따른 직종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19., 2025.2.21.>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직종을 임의로 달리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표 27] 타자치단체 행정사무원 직종 구분 사례

자치단체명	규정 내용
전북 장수군	<p><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p> <p>행정사무원 : 문서의 수발, 부속실 운영·관리,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연구·실험·검사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p>
경남 하동군	<p><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p> <p>사무실무원 : 민원 각종 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보건 등 책임이 필요한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며 종일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p>
전남 진도군	<p><진도군 공무직 관리규정></p> <p>행정사무원 : 민원, 제 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운영, 보건, 복지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 처리 및 사무실 내, 외의 환경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p>
전북 군산시	<p><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p> <p>행정실무원</p> <p>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사 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현장지도 단속 감시 인력, 부속실운영, 방문 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문서수발 및 정리, 연구·실험·검사·진료 업무보조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는 행정보조 인력</p> <p>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인력</p>

2) 사실상 도로(마을안길) 관련 조례 입법

□ ‘사실상 도로’의 개념과 현황²⁾

- ‘사실상 도로’는 법적으로는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길을 말하며,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마을안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이러한 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에서 토지 소유자가 주민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나, 건축물 인접 도로의 소유자가 불분명해진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함.
-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 면적 중 상당 부분이 사유지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통행권을 요구하는 주민과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 충돌, 그리고 예산 부담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실상 도로의 공공관리 범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함

□ 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례 입법 가능성 검토

-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분쟁을 조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음.
 -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사실상 도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례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없이 사유지를 정비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로 보상 기준을 규정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³⁾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김고은, 김승훈(2022))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3) 박준한. (2022). ‘사실상 도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대책. 한국도로협회

- 따라서 ‘사실상 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률 위임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조례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보상 기준이나 권리 제한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움.
- 다만, 「건축법」 제45조는 주민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된 도로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장성군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이에 근거해 조례로 도로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표 28] 장성군 건축 조례

제4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행로로서 공공하수도 또는 도로 포장에 되어있고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일 경우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내 도로로서 공공시설물의 기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 따라서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분쟁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⁴⁾으로 조례로 일률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의 현황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조정 절차 마련 등 행정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
- 법률을 통해서만 사유지 도로의 법적 지위, 관리 책임, 보상 체계 등을 중

4) 박준한. (2022)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음.

- 향후 제정될 법률에는 ‘사실상 도로’의 명확한 법적 정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근거, 관리 및 보상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2년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 제정 논의가 재추진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3)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조례 입법

□ 상위법령에 따른 지정 관리

-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법은 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범위 또한 엄격히 제한됨.

□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

- 상위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별표 1) 중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
 - [별표1] 제5호 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 [별표1] 제5호 다)에 따른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 기준

[표 29]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 내용

<법률>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 2) 잠실(蠶室) / 3) 저장창고 / 4) 양어장 / 5) 사육장 / 6) 작물 재배사 / 7) 식재
<2015.9.8.> /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9)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 10) 온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 2) 담배 건조실 / 3) 임시 가설건축물 / 4)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 5) 관리용 건축물 / 6) 농막(農幕)

- 관련해 일부 지자체(전국 11곳)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등의 설치와 관련된 입지기준·구조기준·토지분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0]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참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과 그 부지에 적용한다.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 또는 이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할 것.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공사진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 나. 시도(소로2류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
 - 다.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 라. 공동주택,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처마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단, 축사는 제외한다.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높이 1미터 이하의 조적조로 할 것.
4.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토지 분할 등)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 조례 입법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현행 상위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시설의 종류·규모 및 입지기준 등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조례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자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 범위나 기준의 변경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함.

IV 장성군 조례 정비 제안

1. 장성군 조례 개정 제안
2. 장성군 조례 폐지 제안
3. 장성군 조례 통합 제안

1. 장성군 조례 개정 제안

- 1)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2)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3)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5)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6)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7)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 8)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9)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10)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1) 장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12)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축제 정비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장성군은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최근 전면 개정을 통해 축제 지원 체계를 보완한 바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축제와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면서 과도한 예산 투입, 낮은 효율성, 안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가 단순한 축제 지원 근거에 그치지 않고, 성과가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의 재정비·폐지 근거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평가 결과 환류 및 통폐합 등 축제위원회의 기능 확대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축제위원회의 기능은 대표축제 추진계획 수립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축제의 평가 결과 환류, 통폐합 심의, 신규 축제 발굴 등에 관한 실질적 심의 기능은 미비함.
- 또한 조례상 축제 평가 규정이 임의규정(“실시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 평가 실시 여부나 결과 반영이 행정 재량에 머무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축제의 통합·폐지, 평가 결과 반영 등 사후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31]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장성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중간 생략)

제17조(사후평가 및 공개) ① 군수는 축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축제별 평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군 누리집 등에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주관단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축제의 콘텐츠 및 운영 능력
2. 안전관리계획 이행 충실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3. 축제 분위기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개정 방향

□ 축제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축제의 발굴 및 통·폐합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명시하여, 축제 정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축제의 통폐합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축제 평가 결과를 위원회가 심의하여 다음 연도 축제에 환류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의 구속력 제고

□ 축제 성과 평가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축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함
- 평가의 객관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주관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표 32]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5조(장성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장성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
<p>1. <u>대표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2. <u>대표축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제17조(사후평가 및 공개) ① <u>군수는 축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축제별 평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u></p> <p>(신설)</p> <p>② (생략) (신설)</p>	<p>1. <u>축제의 발굴·육성, 통폐합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군이 지원하는 주요 축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축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u></p> <p>4. <u>제17조에 따른 축제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u></p> <p>5. (이동)</p> <p>제17조(축제의 성과평가 및 공개) ① <u>군수는 군이 지원하는 축제 중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 평가위원 위촉 또는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축제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축제 주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사업계획서</p> <p>2. 예산 집행 내역 및 정산 보고서</p> <p>3. 결과 보고서 및 자체 평가 결과</p> <p>③ (이동)</p> <p>④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2)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빈집 정비에 따른 구체적 활용 근거 부재

-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빈집 현황에 따르면 장성군의 빈집은 582호로 전남 지역 내에서는 2.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장성군 빈집 정비 실적(2024년 기준)을 보면 모두 204건으로 단순철거로 철거나 정비 후 활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성군의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실적을 보면 총 204건이 모두 단순 철거에 그치고 있으며, 정비 후 활용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조례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단순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임대·공유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리모델링 후 청년·귀농인·예술인 임대주택, 공유공간, 마을공동체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빈집의 재생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장성군 조례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보완이 필요함.

나. 개정 방향

☐ 빈집 정비 대상 선정 및 정비 후 활용 근거 마련

- 빈집 지원 선정 및 집행의 형평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 명시와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
-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명확히 규정

□ 빈집 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 정비 대상 선정, 지원의 형평성,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 중요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빈집 정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 지원금 환수 및 활용 의무 조항 신설

- 정비 후 빈집의 재방치를 방지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 목적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환수 근거를 마련함

□ 성과 평가 및 환류 규정 마련

-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조례에 마련.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빈집 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개선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강행 규정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개정함

[표 33]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u>빈집의 철거하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략)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u>빈집의 철거, 활용 등</u>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u>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② (생략) ③ 군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u>실시하여야 한다.</u>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현행	개정
<p>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u></p> <p>3. 생략 (신설)</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p> <p>(신설)</p>	<p>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빈집 정비 후 제8조에 따른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일정 기간 공공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u></p> <p>3. (현행과 같음)</p> <p>②<u>제1항에 따른 지원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빈집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u></p> <p>③항으로 이동</p> <p>④ <u>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빈집 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p> <p><u>제8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u></p> <p>① <u>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u></p> <p>1. <u>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청년, 고령자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u></p> <p>2. <u>「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시설</u></p> <p>3. <u>문화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u></p> <p>4. <u>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및 활동 공간</u></p> <p>5. <u>게스트하우스, 쉼어하우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숙박시설</u></p>

현행	개정
<p>제8조(빈집의 안전조치)</p> <p>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u>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신설)</p>	<p><u>6.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p><u>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임대 기간, 임대료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9조로 이동</p> <p>제10조(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 ① 군수는 <u>빈집의 활용 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는 정비·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11조 (빈집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u>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2. 빈집정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u> <u>3. 빈집 정비 후 활용 방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u>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조 (활용 목적 유지 및 지원금 환수)</p> <p><u>① 빈집정비 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정비 완료일로부터 군수가 정하는 일정</u></p>

현행	개정
	<p><u>기간(최소 3년 이상) 동안 빈집의 활용 목적을 유지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p> <p><u>1. 제1항에 따른 활용 목적을 유지하여야 할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을 재방치하거나 활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u></p> <p><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p> <p><u>3.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p>

3)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해당 기금의 활성화 필요성

- 장성군은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실질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금이 실질적 기능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할 경우, 회계 관리의 비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해당 기금이 2026년에 편성될 예정인 만큼, 단순 존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용도 확대 필요

- 현행 조례에는 기금을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금의 활용 용도가 최저 가격 차액 지원과 가격 안정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 규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사실상 운용이 중단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음.
- 장성군의 농·축산업 비중과 지역 농가 인구를 고려할 때, 단기적인 가격 안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보호, 경영 안정,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의 사후적 ‘가격 안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활동(재해 대응, 생산조절, 수급 관리)과 농가 역량 강화(신규작물 지원, 유통 혁신, 품질 향상, 교육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방향

- 해당 조례의 개정 방향은 현행 조례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와 활용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1안] 기금의 용도 확대

-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 지원
 - 현행 조례상 ‘가격안정 시책 추진’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하여,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나 전략품목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 ‘저장’, ‘판매’ 등의 선제적 가격 안정 활동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비 보전 지원 확대
 - 산지폐기 결정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비롯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수립 및 유통 개선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소득 작목 육성 및 시범 재배 지원
 - 기존 과잉 생산 품목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신규 소득 작목 육성 및 시범 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시설·기술 이전·초기 생산비 지원 등을 기금의 활용 대상에 포함시킴.

[표 35]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42조에 따라 <u>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u>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50억원 이상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u>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 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u>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u>농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u> (신설) 3.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u>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구매·저장·판매 사업</u> 3. <u>장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략품목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구매·저장·판매 사업</u> 4. <u>산지폐기 결정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 지원</u> 5. <u>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유통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판로 개척, 홍보 등 종합 대책 수립·추진</u> 6. <u>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u> 7. <u>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소득 작목 육성 및 시범 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 시설, 기술이전, 초기생산비 등의 지원</u> 8. (이동)

□ [2안] 농업인 경영안정 기금으로 변경 및 기금 활용 방안 확대

- 기금의 목표를 최저 가격 차액 보장을 통한 농산물 시장 불안정 해소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생산비 압박, 인력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농업의 문제 대응을 통한 장성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확장하도록 함
- 기금의 명칭을 농·축산업인 경영안정 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 역시 그에 맞춰 개정하도록 함
-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신규 소득 작목 육성 및 시범 재배 지원 등을 포함
- 농업 경영 개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재해를 입은 농업인 보험료 지원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안정 지원

[표 36] 장성군 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u>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축산업인의 경영 안정, 재해 대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3조(기금의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농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제3조(기금의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농·축산업인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제4조(기금의 조성) ①농산물 최저 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 생략 (신설) 4. 그 밖에 수입금 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농산물 최저 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 생략 4. 생산자단체 출연금 (5호로 이동)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생략)</p> <p>2. <u>농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u></p> <p>(신설)</p> <p>3. (생략)</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성군 <u>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⑤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 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저장·판매 사업</u></p> <p>3. <u>장성군 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략품목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저장·판매 사업</u></p> <p>4. <u>산지폐기 결정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 지원</u></p> <p>5. <u>신규 소득 작목 육성 및 시범 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 시설, 기술이전, 초기생산비 등의 지원</u></p> <p>6. <u>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유통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판로 개척, 홍보 등 종합 대책 수립·추진</u></p> <p>7. <u>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u></p> <p>8. <u>자연 재해,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 손실 복구 지원</u></p> <p>9. <u>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u></p> <p>10. <u>전문적인 농업 경영 개선 컨설팅 및 교육 지원</u></p> <p>11. (이동)</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성군 <u>농·축산업인 경영안정기금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⑤ (생략)</p>

4)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공무원의 심리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최근 공직사회 내 과도한 민원,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EAP)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현행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는 심리 건강 관리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므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 상담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복지 강화

- 저출산 및 인구감소가 지역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수원시, 서울특별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녀 동반 가족 프로그램 운영, 직장 어린이집 설치, 임신·출산 물품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함.
- 장성군 역시 ‘난임 시술비 지원, 자녀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후생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사기 진작 및 직무 전문성 강화

- 장기근속자나 우수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선진사례 탐방, 배낭 연수 등)을 통해 재충전 및 사기 진작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 있음

나. 개정 방향

□ 심리적 건강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원 조항 신설

-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임신 준비 단계부터의 지원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적응 프로그램 등 복지 지원 제도를 마련함.

□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 지원

-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충전 및 사기 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재직 공무원 포상 및 연수 지원’ 조항 신설
- ‘직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항 신설

[표 37]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원"이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및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5.(생략)	4.~6. 이동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3. (생략) 4. <u>공무원의 문화체험·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u>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3. (생략) 4. <u>공무원의 문화체험·현장학습 등 활동 및 직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u>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6. 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 및 양육물품 지원

현행	개정
7~9 (생략)	<p>등 가족친화적 복지 지원 사업</p> <p><u>7.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u></p> <p><u>8.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u></p> <p>9~11 (이동)</p>

5)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인구 증가 요인으로의 출산 축하금 검토 필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특히 농촌·지방은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함.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축하금·양육비 지원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책임.
- 장성군의 출산축하금·양육비는 타 지자체 조례에서의 출산축하금 등을 비교해봤을 때 특출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유사한 수준임
- 올해 장성군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것이 출산 지원 정책의 직접 효과인지는 면밀한 인과 분석이 필요함.

[표 38] 전남 기초자치단체 출산축하금 비교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장성군	<p><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p> <p>첫째아는 400만원(출생신고시 200만원 지급, 분기별 50만원씩 1년간 지급), 둘째아는 600만원(출생신고시 200만원 지급, 분기별 5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는 800만원(출생신고시 200만원 지급, 분기별 50만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부터는 1000만원(출생신고시 200만원 지급, 분기별 50만원씩 4년간 지급)</p>
고흥군	<p><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p> <p>돌맞이 축하금 50만원</p> <p>쌍둥이 출산 축하금 50만원</p> <p>첫째아~셋째아까지 1080만원(30만원X36개월)</p> <p>넷째아 이상(1,440만원)</p>
화순군	<p><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 <p>첫째아, 둘째아 230만원(10만원씩 23개월)</p> <p>셋째아 690만원(30만원씩 23개월)</p> <p>넷째아 이상 1,150만원(30만원씩 23개월)</p>
보성군	<p><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24개월까지 지급</p> <p>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p> <p>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p> <p>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p>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장흥군	<p><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연차별 지급)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와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200만원</p>
완도군	<p><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시금+36개월까지 분할 지급)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연차별 지급) 여섯째아 이상 : 500만원에 각 100만원 더하여 일시금+분할 지급액은 다섯째아 지급 기준</p>
영광군	<p><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매달 10만원 한도 내 19세까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p>
강진군	<p><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매달 10만원 한도 내 19세까지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조례> 육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매월 60만원, 최대 84개월까지 지원</p>
해남군	<p><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매달 10만원 한도 내 19세까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1. 첫째아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2. 둘째아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3. 셋째아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씩 2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씩 24회 지급)</p>
구례군	<p><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첫째 자녀: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둘째 자녀: 5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 셋째 자녀: 75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p>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영암군	<p><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 <p>첫째아 :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p> <p>둘째아 :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p> <p>셋째아 :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p> <p>넷째아 :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p> <p>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p>
무안군	<p><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 <p>첫째아 15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 2회)</p> <p>둘째아 20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3회 지급)</p> <p>셋째아 1,000만원(출생 신고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9회 지급)</p> <p>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신고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9회 지급)</p>
신안군	<p><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p> <p>첫째아: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p> <p>둘째아: 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p> <p>셋째아: 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p> <p>넷째아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p>

□ 출산축하금 외에 난임 부부 지원, 이동 편의 지원 등 신규 지원 정책 지원 필요

-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 출산·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함.
-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근거나 세부 지원항목이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음.
- 따라서 출산 이후의 양육 지원뿐 아니라, 임신 준비 단계와 난임 부부 지원 등 사전적 단계의 복지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장성군은 신혼부부 관련 지원 조례가 부재하므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완화 정책 등 주거안정 중심의 신규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개별 사업 단위에서 벗어나,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방향

☐ 지원 정책의 구체화

-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추가

- 현행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상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을 포함하도록 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가

- 지원사업의 범위를 ‘출산 이전, 임신 준비 단계’ 까지 확대하여 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가

☐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 외출 및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및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도록 함

☐ 영유아 부모 대상 양육·심리 교육 지원

- 출산 이후의 양육부담 및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모 대상 양육·심리 교육 지원 조항 신설.

[표 39]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군내에 <u>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u> 신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6~7. (생략) (신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현행 유지) 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군내에 <u>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u> 신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6~7. (현행 유지) <u>8.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인 부부를 말한다.</u> <u>9.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u>
제3조(지원사업)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u>1.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u> <u>2.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u> <u>3.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u> <u>4. (생략)</u>	제3조(지원사업)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u>1.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u> <u>2.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사업</u> <u>3. 임신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다자녀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u> <u>4.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사업</u> <u>5.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그 밖의 사업</u> <u>6. (이동)</u>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군내에 <u>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u>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현행 유지)

현행	개정
<p>제8조(지원대상) 건강관리지원 대상은 <u>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u>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다.</p>	<p>제8조(지원대상) 건강관리지원 대상은 <u>군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u>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다.</p>

6)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야간 시간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야간 시간대 (오후 8시~익일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주간보다 현저히 높음. 이는 운전자 시야 제한, 횡단보도 주변 조도(照度) 부족 등으로 인해 야간에 보행자가 잘 인식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함.
-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야간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경찰청은 횡단보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집중조명시설(투광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 설치 후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됨.
- 집중조명시설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안전시설로 평가됨.
- 일부 지자체(전국 61개 시·군·구)는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 시설 설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장성군도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야간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계단, 단차 등 물리적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시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사로 설치나 관리에 대한 구체적 조례 근거가 부족함.

- 일부 자치단체(전국 18곳)는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공공건물·복지시설·문화시설 등에서 경사로 설치 의무 및 지원 범위를 명문화하고 있음.
- 장성군의 해당 조례는 보행환경 개선 전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행약자 대상 경사로 설치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지원의 범위가 불분명해 이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

나. 개정 방향

□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근거 신설
-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근거 마련

[표 40]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 신설

제10조의2(보행환경 개선 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통행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통행로 주변의 집중 조명시설(투광등, 스마트 조명 등) 및 보행유도시설
2. 공중이용시설 및 보행자 통로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단차 제거 및 안전하고 적절한 기울기의 경사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7)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노인복지 거점으로서의 경로당 기능 재정립

- 현행 조례는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의 복지 수요 다양화, 세대 간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의 경로당이 단순한 친목·휴식 공간의 기능에 머물고 있어, 노인 건강 관리, 평생학습, 문화·여가활동 등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경로당을 세대 간 교류와 사회 통합의 공간으로 재편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근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아동돌봄사업(안동시), 세대융합형 복합문화공간(서울 서초구), 중년층 재도약 공간(담양군 ‘중년 쉼터’) 등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 모델이 확산되고 있어, 장성군도 이에 대응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함.

□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접근성 제고

- 장성군의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단순한 이용공간을 넘어 생활 기반형 복지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성·접근성·이용 편의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함.
- 휠체어, 보행보조기구,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 F)」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 필요
- 노인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용 보장을 위해 조례에 노인 친화적 환경 구축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개정 방향

□ 경로당 지원 범위에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근거 명시

- 경로당의 지원 범위(제6조)에 ‘세대 간 교류 및 통합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 또는 파견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등을 추가함
- 경로당 관련 군수의 책무와 관련한 제9조에 세대 간 교류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 제고 환경 마련

-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조성하기 위한 군수의 노력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도록 함

[표 41] 경로당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5. (생략)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u>(신설)세대 간 교류 및 통합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u> 7. <u>(신설)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코디네이터 등)의 채용 또는 파견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u>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u>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u>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u>교육, 여가 활동 외에 세대 간 교류 및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하며,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세대 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
<p>② 생략</p> <p>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②(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지역아동센터, 학교 및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무장애 환경"이라 한다)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용 노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 승강기 설치 및 단차제거 등 시설 개선 2.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3. 시각 및 청각 장애 노인을 위한 안내 설비 및 비상벨 등 편의시설 설치 4. 화장실, 목욕장 등 위생 시설의 노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조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보강 사업 <p>③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에게 제2항의 무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무장애 환경 조성에 우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8)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청년 공동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일자리와 문화, 교육, 주거 환경의 부족으로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만으로는 청년 인구 감소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청년이 스스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장이나 지원금보다 함께 협력하고 배우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관계망 형성이 중요함.
- 현행 조례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가 정책적 원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 지역에서는 일자리·주거·문화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 기반한 청년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공동 창업, 사회공헌, 지역 자원 활용, 문화 기획 등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시설 활용 극대화

- 군이 운영 중인 청년센터 등 청년 관련 시설을 청년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명시하여, 청년들의 교류와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방향

☐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구체화

- 자발적 활동 중심의 ‘청년 공동체’를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명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 또는 단체로 정의함

- 현행 '청년 문화의 활성화' 지원 조항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
- 청년 단체뿐만 아니라, 등록된 청년 공동체에게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

□ 청년 시설 활용 목적 명확화

- 청년시설이 청년 공동체의 교류 및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표 42] 청년공동체 지원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신설) 5.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u>5. "청년 공동체"란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명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 또는 단체로서,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말한다.</u> 6. (이동)
(신설)	<u>제19조(청년 공동체 육성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발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청년 공동체 형성, 등록 및 활동 지원 사업</u> <u>2. 농촌 지역 특성 및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u> <u>3. 청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사업</u> <u>4. 그 밖에 청년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u>

현행	개정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
	<u>(제19조에서 이동)</u> <u>제20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u> <u>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u> <u>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u> <u>내에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행·재정적</u> <u>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생략)</u> <u>2. 제19조에 따른 사업 추진</u> <u>3~5. (생략)</u>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u>(제20조에서 이동)</u> <u>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u> <u>같음)</u> <u>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청년 공동체의 교류,</u> <u>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u> <u>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u> <u>③ 이동 (현행과 같음)</u>

9)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고립 청년의 발굴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이웃 간의 왕래가 적어 은둔형 외톨이의 초기 발굴이 더욱 어려우므로 공식적인 기관 외에 마을 공동체, 이장단, 보건진료소 등 지역 밀착형 조직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 근거가 필요

□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 방식의 근거 마련

- 도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지원 시설이 부족하므로 '찾아가는 지원' 또는 '마을 거점 시설 활용' 등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 마련
-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단순 훈련이 아닌 실제적인 일자리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

나. 개정 방향

□ 잠재적 은둔 위기군 발굴 지원 근거 마련

-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잠재적 은둔 위기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범위 확대.

□ 지역 조직과의 협력 및 연계

- 농촌 특유의 발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이장단 등)의 협력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 마련.

[표 43]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개정
	<u>외부와의 단절이 우려되는 잠재적 고립 위험군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u>
(신설)	<u>제7조(발굴 체계 구축 및 협력)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선제적 발굴을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체(이장, 부녀회 등), 보건소 등 지역 밀착형 조직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3.(생략) (신설) 4.~7.(생략)	<u>(제7조에서 이동)</u> <u>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3.(현행과 같음) 4. '찾아가는 상담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직업 훈련 및 사회 적응 일자리 지원사업 6.~9. (이동)

10)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개정의 필요성

□ 활동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

- 현행 조례에서는 중식비, 교통비 등의 활동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질 높고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활동비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전문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성군의 관광 콘텐츠에 대한 해설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요

- 장성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 대한 해설 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 마련

나. 개정 방향

□ 처우 개선 및 수당 현실화

- 예산 및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 개선 마련
-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군의 주요 특화 관광 자원에 대한 심화 교육 등 지원

[표 44]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6조(군수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생략)	제6조(군수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히 군의 특화된 관광 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
<p>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p> <p>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u>및 강사로</u></p> <p>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p> <p>3. <u>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u></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11) 장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위법이 요구하는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
- 이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지역 예술인 지원

- 지역 예술인은 대체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 형태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창작 환경 개선: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지원, 창작 공간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성군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 확보
- 청년 및 신진 예술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

나. 개정 방향

☐ 군수의 책무 조항에 예술인 복지 증진 내용 포함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 강구, 군민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책무 신설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

- 예술인 복지 및 권익 보호 조항 신설
- 청년·신진 예술인 지원 근거 신설
- 지역 예술인 참여 활성화
-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조례명 변경 검토

- 기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중심으로 예술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지원뿐 아니라 복지·권익·안전망 구축까지 포괄하도록 내용이 확장됨
- 조례의 실질적 적용 대상을 문화예술 전반에서 예술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조례」로 조례명 변경 검토 필요

[표 45]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u>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u> <u>6.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u>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② (생략) <u>③ (신설)</u>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군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u>

현행	개정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p>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청년 및 신진 예술인의 창작 공간 확보 및 활동 기반 강화 지원 4. 취약예술계층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기회 확대 사업 5.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p>
제7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군수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장성군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u>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9조(지도감독)	(이동)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2조(지도감독) 제13조(준용) 제14조(시행규칙)

12)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가. 개정 필요성

☐ 복지, 소득, 문화 기능을 통합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

- 장성군은 농촌 마을이 많아,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는 곧 세대 간 교류 확대, 복지 증진,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으로 직결될 수 있음.
- 마을회관, 창고, 유희건물 등 기존 마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마을 공동시설을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닌, 청년·귀농인·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 통합형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입법 방향

☐ 주요 내용

-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신설해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을회관 외의 유희 시설까지 포함.
- 시설의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 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유도하여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표 46]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u>6.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들이</u>

현행	개정
	<u>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경로당, 유희 건축물 등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제9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u>마을공간 조성사업</u> 5.~8 (생략) (신설) 9. (생략)	제9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마을의 복지증진, 마을환경 개선, <u>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u> 5.~8 (현행과 같음) <u>9.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u> <u>10. (이동)</u>
(신설)	<u>제9조의2(마을공동이용시설의 활용)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된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의 복지, 문화, 교육, 공동 작업, 소득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 청년·귀농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하는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u>

2. 장성군 조례 폐지 제안

1)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대체 입법)

가. 폐지의 필요성

- 해당 조례의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와 설립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적 기구였음
- 현재 국립심혈관센터는 이미 장성군으로 확정·유치되어 2025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의 설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착공 이후 단계는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하게 되므로, 현행 추진위원회의 존치는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이 약화된 상태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거나, 향후 센터 건립 이후의 지역 연계 및 운영 협력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나. 신규 조례입법

☐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안

-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심뇌혈관연구소가 장성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 운영의 근거 마련 필요

[표 47]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연계 및 지역 상생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지역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연구소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프라를 활용한 군민 대상 보건·예방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와 지역 특화 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 간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 정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연구소와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연구소장
3. 장성군 보건소장 및 관련 실·국장
4. 장성군 관내 의료기관 및 대학 관계자
5. 장성군 농업, 관광, 지역 경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 대표
6. 그 밖에 연구소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건강 문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정 및 재정 지원) 군수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 연계 및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소 관계자 및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2.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보건·치유 연계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회의 경비 등 지급
4. 그 밖에 연구소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기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장성군 조례 통합 제안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재 장성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별로 「장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각각 제정되어 있음.
- 이처럼 시설별로 설치 목적과 운영 규정이 분리되어 있어, 법령 적용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중복 규정과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운영의 기본 기준과 지자체의 책무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장성군의 경우에도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로 정비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과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 「장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의 통합 검토

[표 48] 장성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성군 내에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종합복지관"이란 장애인에게 재활상담, 기능회복, 직업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간보호시설"이란 주간에 재가 장애인을 보호하여 재활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의 직업 상담, 훈련 및 고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장성군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기능 및 업무) 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복지관: 재활상담, 직업재활(훈련 및 알선), 의료재활, 취업 전 조기교육, 재가복지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2. 주간보호시설: 주간 보호, 일상생활 지원,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제공.

3. 직업재활시설: 직업 상담, 직업 훈련, 보호 고용, 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안정 지원, 취업 후 지도.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3. 시설별 이용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인력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운영비, 기능 보강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수익금은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잔여금의 사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입 관리) 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위탁 운영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또는 평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장성군민 헌장 조례

☐ 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 장성군을 대표하는 모든 요소를 한데 묶어, 상징물, 헌장, 군민의 노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통합

[표 49]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 군민헌장, 군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u>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6. (생략) (신설)	<u>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6. (현행과 같음) 7. 장성군민의 노래 : 별표 4 8. 장성군민 헌장 : 별표 5
<신설>	<u>제4조의2(장성군민의 노래 등) ① 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4와 같다.</u> <u>② 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4와 같다.</u> <u>③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u>
<신설>	<u>제4조의3(장성군민 헌장) ① 장성군민 헌장의 내용은 별표 5와 같다.</u> <u>② 장성군민 헌장은 군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u>

3)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지원 조례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존 홀로 사는 노인 대상의 조례를 전 세대(청년, 신중년 포함)의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책의 범위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노년층 외에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군으로 떠오르는 청년 및 신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 필요
- 선진적 예방 시스템 구축[예방 강화]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IC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 심리 치료 및 사회 재진입 프로그램 등 현대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경찰, 소방,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배달업, 검침업 등 일상생활 밀착형 민간 자원을 발굴 및 신고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와 협력 체계 구축
-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고독사 전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단일 조례에 담아, 장성군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표 50]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세대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예방, 사회적 고립 해소 등 각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생애주기별(청년, 신중년, 노인 등)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심각한 고립 상태에 있는 가구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요양기관, 민간 배달·검침·우편업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과 협약 또는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 지원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 취미·동아리 등 사회 재진입 프로그램 운영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활동 지원 등 노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특화된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5. 긴급 의료·생계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 자원 연계
6. 고독사 위험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0조(사후 관리 및 공영장례 지원) ① 군수는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현장의 정리 및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TEL. 02-336-0619

FAX. 02-336-0619